

원내대표·대선주자 등 잇단 방문 '공들이기' 가속화 한나라 '호남 구애' 효과 있을까

한나라당의 호남 겨안기가 가속도를 내고 있다. 김형오 원내대표와 전제희 정책위의장, 박계동 예결위 간사 등은 27일 광주시청과 전남도청을 잇따라 방문하며 정책간담회를 갖고 "한나라당은 국회에 반영된 광주와 전남도 예산은 한 푼도 깎지 않고 증액 요구도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당 차원의 꾸준한 노력=사실 한나라당의 호남 겨안기 시도는 눈물겹다. 올해만 당 지도부가 광주를 4번이나 방문했다. 어느 특정지역을 이렇듯 자주 방문하기는 힘들다는 일반적 평가다. 지난 8월에는 강 대표가 "호남에 계신 국민 여러분을 섬ষণ하게 해 드렸던 점에 대해서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지난 2004년 7월에는 당내에 '지역화합특위(위원장 정의화 의원)'를 구성, 호남 지원에 대한 갖가지 정책을 논의해오고 있다. 임태희 의원 등은 '호남에 제2지역구 갖기 운동'도 펼치고 있다.

◇지지율은 상승세=이 같은 노력 때문인지 최근 한나라당의 호남 지지율은 상승세다.

2004년 17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광주·전남 득표율은 2.9%. 대승을 거둔 지난 5·31 지방선거 때는 광주에서 4.7%, 전남에서 5.6%까지 올랐다. 지난 10·25 전남·호남·진도 국회의원 재선거에서 한나라당 후보는 8.2%를 득표했다. "정치적 동토(凍土)에서 희망의 싹을 틔웠다"는 나경원 대변인의 평가가 나올 정도였다.

최근 지지율 올라... 노력 때문?

◇문제는 진정성=한나라당의 이 같은 노력에 대해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선거나 지역주의 극복이라는 명분만을 내세운다면 영원히 호남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특히 호남의 한나라당 비토를 단순한 지역이기주의 차원에서 이해하고 겨안기를 시도

한다면 한계를 넘을 수 없다는 것이 일반적 관측이다.

특히 광명시장의 호남 편해 발언에 이은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같은 언급은 한나라당의 현 주소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한편 광주시는 이날 정책간담회에서 광주국립종합과학관 건립과 광주~완도 고속국도 노

"선거·지역주의 극복 명분 버려야"

선연장 등 정책지원 5건, 자동차부품산업 육성·가전로봇융합화 사업·유비쿼터스콘텐츠 비즈니스 센터·CGI(컴퓨터형성이미지)센터 구축 등 예산지원 8건을 각각 건의했다.

전남은 관광레저도시 건설과 F1대회, 여수세계박람회 등 대형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및 협조를 당부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27일 오전 한나라당·광주광역시 지역사무처에서 열린 정책간담회. 김형오 원내대표(앞줄 왼쪽에서 세번째)와 박광태 광주시장(네번째) 등 한나라당 당직자 및 시청 간부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호남예산 한푼도 안 깎겠다"

이번 광주·전남 방문 목적은 비록, 예산과 관련된 정책간담회 차원이지만 19명의 현역 의원이 참석했고 그것도 하루 전에 와서 자원봉사활동까지 했다.

◇대선 주자들도 가세=이같은 '공들이기' 목적은 분명, 내년 대선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김 원내대표도 "정치집단의 모든 행위는 정치적이고 선거와 결부되지 않는 것이 없다"고 인정하는 대목이다. 때문에 대선주자들의 '호남 겨안기'도 활발하다.

손학규 전 경기도지사는 지난 6월30일 퇴임과 동시에 '100일 민심대장정'에 들어가면서 첫 출발지로 장성을 택했다. 박근혜 전 대표와 이명박 전 서울시장도 이 지역에서 지원유세를 했고, 읍 들어서만 공식적으로 세 번이나 광주를 찾았다.

■ 한나라 - 광주시 정책간담회

27일 광주시와 정책간담회를 가진 한나라당 의원들이 문화전당 랜드마크 기능과 문광부 - 광주시간 협조 체계를 거론했고, 박광태 광주시장은 시와 문광부간의 갈등을 시인해 관심을 끌었다.

이날 간담회에서 박계동 예결위 간사는 "8천억원 가까이 들어가는 문화전당이 지하 설계에 치중돼 있어 상징성이 떨어지는 것 같다"며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핵심시설인 만큼 외형적으로 적절한 규모나 시선을 끌 수 있는 외관도 가미되면 더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문화전당 규모를 감안하면 매년 400억원 이상의 관리비로 인한 적자 발생이 불가피한 만큼 건물 규모를 줄이고, 대신 취지들을 높일 수 있을 뿐만 향후 부가가치가 높은 CGI

박계동 "문화전당 지하 설계 치중 상징성 떨어져" 박 시장 "여론 수차례 기획단에 건의... 목살 당해"

(컴퓨터형성이미지)와 같은 문화산업 분야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를 하는 것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을 성공시키는 한 방법이 될 것이다"고 제안했다.

이와 함께 문광위 이재웅 의원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과 관련, "사업의 성공을 위해서는 문광부 문화중심도시조성기획단과 광주시의 협조체계가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현실은 어떤지 궁금하다"면서 "현실적인 어려움이나 문제점이 있으면 한나라당이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형오 원내대표도 "문화중심도시 사업은 이

제 정부 주도에서 광주 중심, 시민 중심의 사업으로 바뀌어야 한다"면서 "청와대, 정부 일장의 문화도시가 아닌 광주시민들이 인정하는 문화도시가 되도록 정책위, 예결위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광태 광주시장은 "문화전당의 랜드마크 기능이 약한 만큼 외형적 상징성을 가미해달라는 것이 시민들의 여론이어서 수차례 기획단에 건의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아 설계가 지하 위주로 됐다"면서 "문광부 기획단이 광주시나 지역의 여론 수렴에 등한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민주 '정계개편 내분' 일단 봉합

한화갑-정균환 정계개편 이견 해소 "민주 중심 제3지대서 개혁세력 결집" 고건 놓고 갈등 불씨는 여전히 남아

한화갑 대표와 정균환 부대표가 정계개편 방향을 둘러싼 이견을 해소함에 따라 민주당 내분 사태가 일단 봉합 수순에 접어들었다.

한화갑 대표와 정균환 부대표, 김효석 원내대표 등은 지난 26일 회동을 갖고 민주당의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제3지대에서 민주중도개혁세력이 결집, 오픈 프라이머리(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져 정치권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27일 민주당 김효석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갖고 "지난 26일 한화갑 대표와 정균환 부대표가 만난 회동을 통해 그동안의 오해를 풀고 정국 현안에 대한 해법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김 원내대표에 따르면 한 대표와 정 부대표는 정계개편 방향과 관련 "민주당 중심으로 정계개편에 나서는 한편 큰 틀에서는 제3지대에서 민주개혁세력이 결집, 완전국민참여경선제를 통해 최종 대선 후보를 선출하자"는 데에 의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내가 고건 전 총리를 배척한다는 것은 오해"라는 입장을 나타냈으며 정 부대표도 "내가 고건 전 총리 쪽에 편향돼 있다는 것은 잘못 알려진 사실"이라고 말했다.

또한, 전북도당 내분사태와 관련, 정 부대표에 대한 제명 통보로 물의를 일으킨 엄대우 전북도당위원장 직무대행을 가급적 조속한 시기에 교체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두 사람의 감정 대립의 단초가 됐던 '정 부대표 당원제명 통보' 처분에 대해서 한 대표가 "전북도당 차원의 조치로 제명통보는 원천무효"라는 점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효석 의원은 "두 사람이 이날 회동을 통해 해쳐모여 식 통합신당에 대해 견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을 확인했고, 오해를 푸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날 회동으로 민주당 내분 사태는 봉합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정계개편 노선 갈등은 아직 잠복된 상태라는 평가다.

한 대표와 정 부대표가 고건 전 총리를 각각 '경쟁관계'와 '상호보완관계'로 바라보는 시각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계개편의 흐름에 따라 민주당 내부의 노선 갈등은 다시 불거질 수 있으며 일각에서는 내년 2월 전당대회를 기점으로 한 대표와 정 부대표가 다시 정면충돌할 가능성도 제기하고 있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 부동산 폭등 놓고 시각차 /

"과열 상당부분 실수로 때문"

이태경 토지정의연대 사무처장

이태경 토지정의시민연대 협동사무처장은 27일 "부동산시장이 비이성적 과열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번 폭등은 상당부분 실수로 비롯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무처장은 이날 오전 토지정의시민연대가 서울 중구 민주회동기념사업회에서 개최한 '부동산 가격 폭등의 원인 찾기와 대안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를 통해 "추세 무렵부터 아파트를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기 시작해 수도권 전역과 연립주택까지 가격폭등이 확산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그는 "그간 부동산 가격을 끌어올렸던 세력이 투기적 가수요였는데 비해 지금은 실수로 비중이 높아져 대응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주택공급 확대론 안정 못시켜"

이정우 전 청 정책기획위원장

같은 토론회에서 이정우 전 청와대 정책기획위원장은 "투기수요를 억제해야지, 주택공급 확대정책으로는 절대 부동산시장을 안정시킬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전 위원장은 토론회에서 "투기수요는 무한대로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토지 불로소득의 환수가 문제 해결의 핵심"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가 기존의 '투기수요억제' 기조를 '공급 확대'로 바뀌는 안된다"며 "부동산 정책의 일관성을 갖고 중부세와 양도소득세 등 세제를 강화하는 한편 금리조정과 분양권 공개, 후분양제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강재섭 "김용갑 대신 내가 봉사활동 하겠다"

한나라당 윤리위원회가 김용갑 의원의 정계 문제를 둘러싸고 논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강재섭 대표가 27일 그 해법을 제시하고 나섰다.

강 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당 대표로서 김 의원의 문제와 관련, 자신이 창원에서 사회봉사활동을 하겠다며 이것으로 김 의원의 사회봉사 명령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해줄 것을 윤리위에 요청했다.

한나라당 윤리위가 '광주 해방구' 발언과 창녕 보선에 나선 무소속 후보 지원으로 물의를 일으킨 김 의원에 대해 '사회봉사 명령' 적용 여부를 놓고 논란을 거듭하고 있는 것에 당대표로서 종지부를 찍겠다는 의미이다.

그는 "이번만큼은 일벌백계 대신 당 대표로서 십자가를 질 수 있도록 해줄 것을 (윤리위에) 간곡히 요청한다"며 "그러나 제 생각이 그렇다는 것이고 (징계는) 윤리위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당 윤리위는 일반 사법부와는 조금 다르다. 어차피 정당정치 속에서 있는 것이고 당의 단합과 향후 더 강하고 제대로 (징계를) 하기 위해 기반조성을 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강대표 측근은 "당 대표가 사회봉사활동을 하는 데 김 의원이 윤리위 징계가 없더라도 동참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 김 의원에게도 명분을 주면서 당의 분란을 막기 위한 강재섭식 해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

매일밤 8시부터 쏠쏠쏠 애들은가라!!

방실이

11월 29, 30일

실운도

12월 7, 8일

부랑친구 100%

광주 상무 나이트

(상무지구 롯데마트 옆)

신형인내

신형인내... (text continues in columns)